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7년 11월 27일

| 금주의 이슈 |

- I. 文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문제점 진단 / 1
- II. 송타오 中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 의미 및 전망 / 10
- III. 전염병과 확산과 '원 헬스(One Health)' / 17

## 금주의 이슈

- ❖ 금주는 경제·안보·환경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고 있음. 제1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쑹타오 중국 특사의 김정은 면담 불발의 의미와 북·중, 북·미 관계 냉각과 북한의 도발 재개 우려 등의 전망을 제시하였음. 제3편에서는 또다시 발생한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여 ‘원 헬스(One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함
- ❖ 文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및 국가재정투입을 통한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은 법적·경제적 논거가 미약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며, 표방하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저소득·빈곤층 근로자의 고용감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증가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
- ❖ 中 시진핑 주석의 對北특사 쑹타오 부장의 김정은 면담 불발은 북한식 외교의 ‘마이 웨이’로 비쳐질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의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해석됨. 더욱이 쑹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중, 북미 관계의 냉각 및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함
- ❖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에 대응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와 관련 사람과 동물, 환경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개념을 도입,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2017. 11. 27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 I. 文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문제점 진단

문재인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및 국가재정투입을 통한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은 법적·경제적 논거가 미약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며, 표방하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저소득·빈곤층 근로자의 고용감소 및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증가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

##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요지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 경감 목적 표방

○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을 발표(11. 9)

-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최저임금위, 7.15)됨에 따라 영세 업체에 한해 지난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의 초과분(9%)을 국가 재정투입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임
-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함으로써 文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명목임
- 기업-가계간, 고소득-저소득 가계간 격차 및 내수부진·저성장 극복을 위해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며, 따라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해법임을 동 사업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과제이며, 선순환 효과를

촉발할 것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명시 ←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행수단으로 활용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요약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업체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과세소득 5억원 사업주는 제외

####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단,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함)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일용직 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시 인정)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지원 금액

- 월 13만원(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지난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제한 9%에 해당하는 12만원 + 노무비 1만원)

#### - 추가 지원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

- 文정부가 확정·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의 문제점을 동 시행계획 내용상의 문제점과, 동 사업계획 시행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측면을 나눠 살펴봄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내용상의 문제점

○ 국가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요건 미비 등 법률적 근거 불충분

-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 수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임에도 3조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文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11.10)

○ 불분명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한시적 사업시행에 따르는 부작용

- 文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총 7조 3,462억 원 (연평균 2조 4,487억 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국회예산정책처, 심재철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재정**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29,294	23,322	19,604	72,220	24,073
운영비	414	414	414	1,242	414
합 계	29,708	23,736	20,018	73,462	24,487

- “文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10.18)

- 한시적 형태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주는 충격이 매우 큼

-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시간당 1,061원 중 정부지원금 581원 외에 해당 사업자가 479원을 부담해야 함

-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 하지만, 증세는 文정부에서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소득감소의 요인

※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전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당초 약속한 ‘한시적 유지’도 매우 힘들게 됨. 더욱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

#### ○ 부정수급 등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시책의 실효성에 의문

- 일자리안정자금의 수령을 위해 30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분할하거나 감원, 190만원 미만으로의 월급 조정 등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동 지원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

- 정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80만개(대상 근로자 300만명)로,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실질적 감독능력에 의문

- 사업주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기부담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보조하더라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이므로 국가재정 투입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음

□ 文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되더라도 文정부의 경제성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은 물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우려

-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文정부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18~2020년**

(단위: %p)

	최저임금 인상 총효과(A+B)			경제적 효과(A)			재정지출 효과(B)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실질경제 성장률	0.00	-0.02	-0.04	-0.02	-0.06	-0.12	0.02	0.05	0.09
취업자수	0.00	-0.01	-0.03	-0.01	-0.05	-0.10	0.01	0.04	0.07

주: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동시에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文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선순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 산업화 경제에서는 文정부에서 주창하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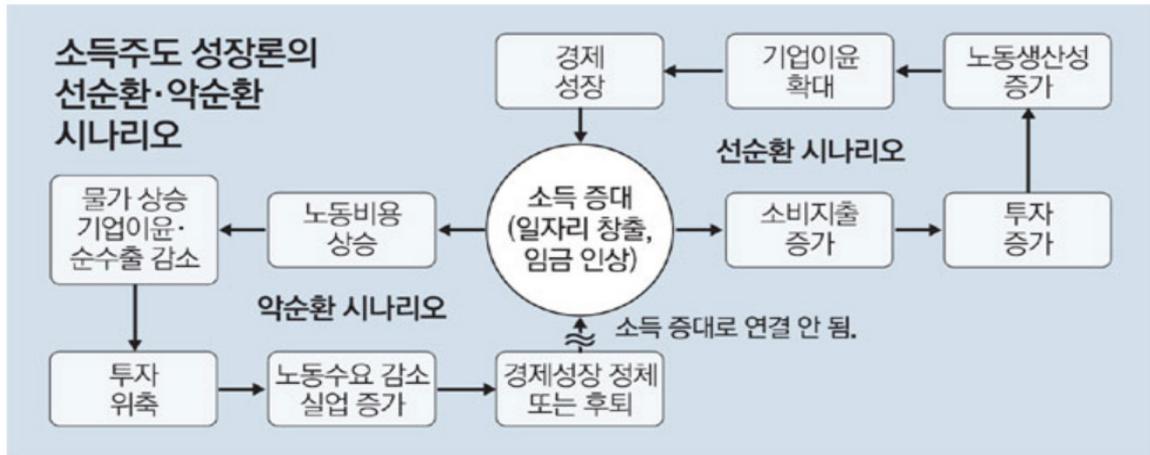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의 목적으로 명시된 ‘소득주도성장’은 주류 경제학계인 신고전학파의 정론이 아님. 칼레츠키 등 포스트케인지언 일부 학자들이 주창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에서 정의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 및 文정부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함께 묶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 부르고 있는 것임

※ 시장에서의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이윤은 이해상충 관계임에도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마치 같은 이익집단인 것으로 표현

- 임금주도 성장론의 실천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은 ‘국제 공조’ 임. 임금 상승이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국제 경쟁력이 유지됨

• 특정국가의 임금 상승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해 제품가격이 인상하여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때 함께 임금을 올려 주는 국제 공조 없이는 고용축소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타격을 받게 됨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에 따른 고용감소, 소득양극화 확대 불가피



출처: 매일경제(9.13)

-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림에서 보듯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상호 모순 되는 양면이 병존
  - 소비지출증가와 노동비용상승 사이에서 임금인상의 폭이 크면 클수록 악순환의 위험이 커지므로 임금인상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의 함은 국민소득증가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수 없으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음
  - 더욱이,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음
- 결국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뿐 아니라 총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3. 검토 의견(당에 주는 시사점)

□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일자리안정자금→소득주도성장은 실현될 수 없는 반시장적 경제 포퓰리즘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 확충, 소비증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음

- 민간부문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 발상 자체가 반 시장적이며 지속적일 수 없음

□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상충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존의 EITC와 충돌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후생이 저하될 우려

※ EITC는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이 오른 만큼 EITC 적용대상은 감소하게 됨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연간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짐

○ 소득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저임금근로자 타깃의 최저임금제도보다 저소득 근로자를 타깃으로 하는 EITC가 보다 더 효과적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증가는 임금 증가분이 저소득근로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함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에 불과.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저소득층’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자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있음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70%는 빈곤가구가 아닌 저소득 가구나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함)

[ 작성: 이종인 경제정책실장 ☎02-3786-3809; 최홍석 사회정책실 연구팀원 ]

## II. 쑹타오 中 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 의미 및 전망

中 시진핑 주석의 對北 특사 쑹타오 부장의 김정은 면담 불발은 북한式 외교의 '마이 웨이'로 비쳐질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의 경고음이 울린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해석되며, 더욱이 쑹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중, 북·미 관계의 냉각 및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함

### 1. 푸대접 당한 쑹타오 中 특사

□ 中 쑹타오 특사 북한 파견, 그러나 김정은 면담 불발

○ 中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 특사 방북(11.17): 중국의 북핵문제 중재 역할 기대

- (방북 명분) 제19차 당대회 결과와 시진핑 2기 체제 출범 설명

※ 사회주의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주요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관행

- (실질적 목적) 中 시주석과 美 트럼프 대통령 간 북핵 논의 결과 전달 및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나오도록 촉구, 중국이 북핵문제의 중재 역할 재가동 의미

○ 北 최룡해 회담(11.17): 상호 체면치레

- 北 정권 ‘2인자’ 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회담
-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양측은 북·중 전통적 우의가 모두에 매우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평가
- (北 조선중앙통신) 송부장이 최룡해 부위원장에게 김정은을 위한 선물을 줬다고 전함

○ 北 리수용 회담(11.18): 상호 異見 재확인

- 北 외교분야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회담
-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양측이 북·중 양당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부문 왕래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北 조선중앙통신)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쌍무관계를 비롯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송타오 특사 금수산 참배, 우의탑 헌화 등(11.19): 北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

○ 그러나, 송타오 특사의 김정은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북·중 양측 반응: 북핵문제 간접 논쟁

### ○ 北측: 북핵문제 線긋기

- <노동신문>(11.17)은 ‘어리석은 야망을 버려야 한다’ 題下 정세 논설에서 “인민의 안전문제를 흥정탁(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 며 선을 긋는 행태를 보임
- 한대성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11.17),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지속 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 문성모 駐태국 북한대사(11.20), “미국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 반드시 이길 것”

### ○ 中측: 북핵문제 발 빼기

- <환구일보>(11.18) 사설, “쑹부장은 마술사가 아니다. 방북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고 주장, 특히 “쑹부장의 방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으나 쑹부장은 (대화) 문을 조금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입을 강조
- 류샤오밍 駐英 중국대사(11.19), 중국정부가 북한 설득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며 “아직 외교해법 여지 있다” 고 설명, 특히 한반도문제의 ‘근원’ 은 한국의 親美 관계라고 지적

## 2. 의의: 북·중 관계 경고음

### □ 경색된 북·중 관계의 현재

○ 김정은을 면담하지 못했다는 추정 우세: 무게감 없는 보도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11.21), “北 노동당 중앙위 지도자와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  
간단 보도
-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쑹타오 부장의 방북은 북한의 中특사 거부 관례가 없었던 전례로 보아 경색된 북·중 관계의 민낯이 드러난 계기
- 만약 면담이 끝내 불발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대외에 보여주는 메시지이며, 동시에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강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 가능

○ 시진핑 2기 체제 출범 기점으로 북·중 관계 변화: ‘혈맹’에서 ‘정상 국가간 관계’로 전환

- 김정은 집권 6년이 된 지금까지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 중국의 특사 파견은 시진핑 집권 2기 북·중 관계 구상을 밝히는 ‘간접 대화’ 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은 미·중 정상외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의 견제함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음

## □ 과거보다 격이 낮은 쑹타오 특사

-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에는 리젠궈 黨 정치국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2007년 제17차 당대회 뒤에는 류원산 黨 정치국위원 겸 서기처 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 쑹타오 특사 이력: 대표적인 ‘시자궈(習家軍: 시진핑 측근세력)’
  - 1955년생, 푸젠성에서 근무하다 인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 현재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중앙위원회 위원 겸직
    - ※ 중공당 대외연락부(중련부): 1951년 신설된 중련부는 중공당의 대외 교류를 총괄하는 기관, 중국의 안보·외교 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특히 中공산당-北노동당의 黨대黨 교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북·중 관계 형성과정의 핵심적 연결고리 기능 수행

### 3. 전망: 북·중, 북·미 관계 냉각 및 북한 도발 재개 가능성

#### □ 북·중 간 북핵 해결 표류: 핵 선긋기(北)와 북핵 발빠기(中)

##### ○ 중국, 雙中斷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속 견지

- 북한의 핵 보유 반대, 한·미·일의 유엔 결의 이외의 對北 독자제재와 군사압박 강화 반대, 쌍중단을 바탕으로 향후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

※ 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 ○ 북·중 간 핵문제 해법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소통채널 유지

- <환구시보>의 ‘북·중 관계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하다’ 題下 공동 사설에서 北이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또한 “북·중 관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양국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양국은 핵문제에서 심각한 異見이 여전하다”는 송특사 방북 이후 중국입장을 적시

#### □ 북·미 관계 냉각 및 북한의 도발 가능성

##### ○ 송특사 방북 이후 미국의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동북아정세 불안 우려

- 9년만의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미 관계 급속 냉각 가능성

○ 아울러, 北 미사일 발사나 사이버공격 등의 도발 재개 가능성

⇒ 당과 국회 차원에서 북·중 관계 경색과 북·미 관계 급속 냉각에 따른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 작성: 윤승현 객원연구위원 ☎02-3786-3845 ]

### Ⅲ. 전염병과 확산과 ‘원 헬스(One Health)’

조류독감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야생 철새로 인한 감염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 조류독감 감염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이와 관련, 사람과 동물, 환경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개념을 도입,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1. 조류 독감 발생과 대응

##### □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조류독감

- 최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증폭
  - 정부는 초등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방역체계 가동
  - 물샐틈없는 방역망으로 확산을 막아야 하며, 발병 진원지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신고 시스템과 전파 경로의 신속한 파악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대표적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

-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2003년 이래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이번에 발견된 H5N6형은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2014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1월 발병한 조류독감으로 835개 농가의 닭, 오리, 메추리 등 3,337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경제적 피해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피해를 입음

#### □ 사전 예방과 함께 근원적 해결책 모색

##### ○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 정보의 관리, 원인 규명 필요

-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수의사, 방역 당국 등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가축의 종류와 이력, 이동날짜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지난 6월 한 여름 날씨에도 조류독감이 발생, 야생 철새를 원인으로 단정 짓는데 의문이 제기됐는 바, 과학적 역학조사로 바이러스의 토착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함

##### ○ 살처분도 하나의 방역 대책이긴 하지만, 최소화해야 함

- 지금처럼 발생 농가 반경 3km내 가축에 대한 무조건적 살처분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됨
- 비인도적인 살처분 뿐만 아니라 사체가 묻힌 곳은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병원균의 원천으로, 침출수가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큼

○ 동물복지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

- 동물·환경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공장식 밀집사육’ 비율이 98.5%(2015년 기준)으로 절대적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좁고 비위생적이며 열악한 환경은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발생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비판
-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축사 시설 현대화,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 농가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2. 신종 전염병 확산과 ‘원 헬스(One Health)’

□ 급속하게 확산되는 신종 전염병

○ 바이러스는 “지난 세기 인류 최악의 재앙” 1)

-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000명이 테러로

1) 「The Virus Storm」 (Nathan D. Wolfe)

목숨을 잃은 반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18,000명이 신종플루로 사망

- 1928년에는 인플루엔자로 당시 세계 인구의 3%에 달하는 약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는데 이는 20세기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수를 합한 것 보다 많음

### ○ 인간과 동물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 인간에게 감염되는 병원체의 60%가 동물로부터 유래되고, 새로 발견되는 동물 전염병의 75%는 인간에게도 전파된다고 함
- 메르스(MERS)는 낙타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됐으며, 조류독감, 구제역, 브루셀라병, 뉴캐슬병과 같이 동물과 인간을 넘나드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

### □ ‘원 헬스(One Health)’ 를 통한 대응 시급

#### ○ ‘원 헬스(One Health)’<sup>2)</sup>는 사람과 동물, 생태계의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총체적 노력

- 의사, 수의사, 보건 전문가, 야생동물 관리자, 생태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소통하면서 인간과 동물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질병 관리

---

2) ‘원헬스’는 2003년 4월 7일 워싱턴포스트 Rick Weiss기자가 에볼라 출혈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William Karesh의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선 안 됩니다. 단지 하나의 건강(One Health)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등장(위키백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 ‘원 헬스’ 는 기후변화와 생태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독성, 국민의 식품위생, 의생명과학 등 보건 분야 전반에 매우 유효한 접근방식
-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은 사람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생활환경과 음식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인수공통감염의 숙주로 여겨지고 있어 ‘원 헬스’ 개념을 토대로 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작성: 이형선 연구위원 ☎ 02-3786-3810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 3786. 3800 E-mail : ydi@ydiins.or.kr Website : www.ydi.or.kr

---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